

광주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추진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 살수차 투입 등 주의·경보 발령시 종합상황실 운영... 유관기관 비상근무체제 전환

광주시는 미세먼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 광주시는 최근 시정 9층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에서 자치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협의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광주시는 그동안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76 $\mu\text{g}/\text{m}^3$) 수준일 경우 시행했던 비상저감조치를 앞으로 '나쁨' (50 $\mu\text{g}/\text{m}^3$) 수준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감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관급 공사장 (14개소) 조업 단축, 민간 공사장(364개소) 조업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다. 광주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차량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민간부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의무시행 대상인 부제 차량은 광주시와 자치구 등 공공청사 주차장 출입도 제한된다.

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청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미세먼지 발생 농도를 언론매체와 SNS, 전광판, 아파트단지 안내방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한다. 이와 함께 도로청소 등 비상저감조치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상황 관리하고 유관기관과 자치구 등은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근무한다. 광주시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정책분과, 시민기업협력분과, 푸른하늘리더단 3개 분과 70명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도 구성하고 26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는 미세먼지 정책수립은 물론 교육, 거리 홍보와 캠페인, 차량2부제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동참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앞장서게 된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민간부문 차량2부제 시행, 배출가스과다 경유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 관리 강화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한다. /정승현 기자 jsh9668@



달콤아삭 사랑 버무리 김정김치 나누기 정승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17일 오전 남구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 '달콤아삭 사랑 버무리 김정김치 나누기'에 참석했다. 정 행정부시장이 이날 행사에서 중요 내빈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서구, 예산 확보 분주... 국회 등 방문 서대석 청장, 총 120여 억원의 국비 지원 요청

광주시 서구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서구는 16일 서대석 서구청장이 구정의 주요 핵심사업이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를 차례로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무총리실 남평오 민정실장을 방문한 서 청장은 KT&G상상마당 국제교류센터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KT&G상상마당은 문화예술인 창작 및 육성을 지원하고 ICT를 기반으로한 청년창업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을 만나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트라우마센터 건립비와 서창동 곡물 건조저장시설 증설비 19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의당 김중대 의원에게는 진로직업체험센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등이 들어설 '사회적가치 공동체지원센터 건립비' 5억원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정배, 송갑석 의원 측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태평교 등 내진보강사업비 그리고 풍암호수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등 11개 사업에 90여 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서대석 서구청장이 남평오 총리실 민정실장에게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대석 청장은 "서구의 보다 나은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정청 공조를 통해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서구는 '상무시민공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50억원과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등 총 66억 5천만원의 국시비를 확보해 민선7기 중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윤규진 기자 jin2001@

동구, 관광자원 전수조사 바탕으로 인프라 구축 동구투어·관광지도 제작 등 다양한 분야 활용 기대

광주 동구가 관광자원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동구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관내에 산재해 있는 근대 역사문화자원과 현대 문화예술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관광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축제 및 행사, 전통시장과 특화거리, 숙박, 박물관·미술관, 문화재·유적 등 32개 분야 374개 항목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동구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정책 계획수립, 관광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관광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 중이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동구 팸투어(사전답사여행) '짜복짜복 문화마실'은 이번 관광자원 전수조사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11월부터 제작에 들어간 '동구 관광지도'도 마찬가지다. 동구는 전수조사 덕분에 6개월 이상 소요될 지도제작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구는 이번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다양한 부가 콘텐츠를 창출하는 '원 소스 멀티 유스(One Source Multi Use)'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관광자원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대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등에 요긴하게 쓰이게 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관광자료 특성을 감안, 실시간으로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ghszk@

"주민이 권리 구제"...광산구 시민권익위 구성

조례제정 구의회 심의 남아...불합리 제도 개선 기대 광주 광산구가 주민 행정 참여를 보장하고 규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민권익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시민권익위 설치와 운영 방안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구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광산구는 주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 위법한 처분으로부터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감사회 청장이 공약한 시민권익위 설치에 착수했다. 기존 감사관실 또는 민원봉사과가 수행했던 업무 가운데 주민 입장에서 해법 마련이 필요한 사안을 시민권익위에 배당한다.

구청과 산하기관의 고질적인 민원 및 고충을 조사하고, 조정·중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청장 또는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조치 요구 또는 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한다. 행정·재무·복지·농업·도시·환경·건설·건축 등 분야별 경력과 덕망을 지닌 주민

을 남녀 성비에 맞춰 공개 모집한다. 위원 모두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한다. 활동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가 얽힌 안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의 심의 참여를 제한한다. 매달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적 기능에만 충실하도록 위원 해촉 규정을 둔다. 조례 제정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내달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원 모집과 위촉을 거쳐 내년 3월께 제1기 위원회가 출범할 전망이다. /고훈석 기자 ghs@

그린알로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